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회의 고령화 비교

바이베코바 악토르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 학년

지도교수: 방정식

Title: *The Comparison between an Aging Society of Korea and Kazakhstan*

Author: *Baibekova A.K.,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3 grade),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aging society of South Korea and Kazakhstan. The article describes the following sub-themes:*

1. *Current circumstances of aging in Korea*
2. *Features of aging in Korea*
3. *Korea's society preparation to aging*
4. *Aging prevention policy in Korea*
5. *Kazakhstan's aging population*
6. *Countermeasures against aging process in Kazakhstan*

As we know, the aging population is a huge demographic problem in the world. Asia and Europe are the two regions where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recently have faced population aging. In these regions within twenty years many countries will be face a situation where the largest population cohort will be those over 65 and average age approach 50 years old. Dynamic, prosperous, hungry to get ahead country in Asia-Korea has gone from being poor to being rich in the space of two generations, but today Korea has a problem. Korea is one of the Asia and world's most extreme examples of these demographic aging challenges. And the same things we can tell about Republic of Kazakhstan. Population is of course aging throughout the world. The challenge facing Korea and Kazakhstan, however, is especially daunting. With one of the lowest birth rates in the world, Korea is about to lose a large chunk of its population.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current population of 50 million will start to decline sometime between 2020 and 2030; by 2060, it will have plummeted to somewhere between 34 million and 44 million. By then, South Korea will be a country full of old people. Half of the population will be over 60, while only a fifth will be under 30. And also according to young and

developing country, Kazakhstan's Statistics, a quarter of Kazakhstan's population will be over 65 years old by 2050. So this article will reveal all about aging population in these countries.

Keywords: *The aging of Korea, features of aging, society preparation, policy, the aging in Kazakhstan, countermeasures*

주제어: 한국의 고령화사회 특징, 고령화 준비 정책, 카자흐스탄의 고령화, 대응 방안

들어가는 말

인류는 예로부터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부터 질병, 범죄,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위험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의 고령화"이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큰 문제가 되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령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고령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의 심각성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한국과 고령화사회로 이제 막 진입한 카자흐스탄을 비교하여 두 나라가 고령화사회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1. 한국의 고령화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할 때, 한국이 고령사회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19년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¹

한국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한국의 평균기대수명부터 살펴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83년 67세이다가 2008년 80세에 달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통

¹ <한국경제학보> 19-1, 2012.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19, No.1 Spring 2012)

계청은 2030년 남자는 79.79세, 여자는 86.99세로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고령화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령화사회(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를 지나 초고령화사회(20%)로 늘어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2013년 합계 고령화율은 2013년말 12.2%로서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으나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고령화 시대에 보다 부합한 지표인 최빈사망연령 역시 1983년 71세에서 2008년 85세까지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망통계가 1~90세까지 일괄적으로 작성되어 90세 이상 사망한 노인의 경우 일괄적으로 90세로 간주된다. 한국 여성의 최빈사망연령이 85세임을 감안할 때 3.7로 추정된 표준편차는 데이터 집계에서 기인한 문제라 하겠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아직 90세 이상 초고령자의 사망통계가 없어서 최빈사망연령 이상 고령자의 정확한 표준편차 값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명의 지속적 연장 가능성을 검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²

또는 고령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중 한 가지는 유년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인데 한국의 고령화현상을 반영하듯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80년 유년인구 100명에 노인인구 11명 수준이던 것이 2010년에는 68명으로 증가하고, 2016년이 되면 10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유년인구의 4.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의 14세 이하 유년인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나타내는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과거에는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다산다사형태인 피라미드형에서 유년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종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할 노인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에서, 2000년 10.1%, 2020년 21.7%, 2050년 72.0%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 즉 200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으나 2050년에는 생산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예측된다. 또한 향후 전체 노인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노인, 80세 이상 고령노인, 여성노인의 증가율이 높고,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경제적 여력이 있는 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³

² 박명호, "한국과 EU의 고령화 비교 연구", <EU학 연구> 16-1, 한국 EU 학회, 2011.

³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22&cid=46634&categoryId=46634>

2. 한국 고령화의 특징

한국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한국은 21 년에 불과하여, 프랑스(103 년), 미국(70 년), 영국(50 년), 일본(25 년)에 비하여 훨씬 빠르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젊은 연령층의 도시 유출로 인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나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핵가족화와 경로효친사상의 퇴조로 인하여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반면에 사회공공부문의 노인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생계부양자 조사에 따르면, 1994 년에 비해 "부모가 스스로 해결함"은 4.0% 늘어난 41.6%, "자녀가 해결해 줌"은 3.9% 줄어든 58.2%로 나타났다.

넷째, 여자의 평균수명이 높은 등의 이유로 고령층에 갈수록 남자의 수에 비해서 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⁴

3. 한국 사회의 고령화 준비

한국 사회의 고령화 시대 준비 정도는 고령화에 따르는 병화를 한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고령화 대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1 년 5 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200 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⁵,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고령화 준비 정도를 정리하였다.

우선 고령화 시대의 도래가 축복인지, 재앙인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 축복이라는 응답은 32.9%인 반면 재앙이라는 응답은 40.1%로 재앙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더 많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고령층은 최빈사망연령 85 세 시대를 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령 생활에 대한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했다. 그러므로 65 세 응답자의 2/3 는 노후의 삶을 축복보다는 재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⁴ 이현승, "늙어가는 대한민국", <월간조선>, 1999.9.

⁵ 전홍택 외, <100 세 시대 준비 정도>, 2011.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때 걱정되는 것은 건강, 생활비, 일자리, 여가시간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국민의 노후생활 관련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이라는 점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후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비율(31.2%)과 하지 않는 비율(33.1%)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관리는 소득 수준별 차이가 뚜렷하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국민 건강관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 예방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국가적 대비정도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됐다든 응답이 전체의 7.5%로, 응답자의 92.5%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들 역시 자신의 노후생활을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비율(34.6%)과 하지 않는 비율(34.5%)은 거의 같게 나타났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노후생활비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특징은 장년층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 노후소득을 준비한 비율은 장년층 저소득 계층은 25.6%이지만 고소득계층은 61.9%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장년층 중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민 연금 가입을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노후 일자리도 노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이고 고연령일수록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 중 저소득 계층은 17.9%, 고소득 계층은 31.7%가 노후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년층에서의 일자리 준비 격차는 노후소득이나 건강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 여유시간과 관련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22.9%)이 하지 않는 비율(49.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의 여유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고소득일수록 고연령일수록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신의 미래를 과연 누구의 책임 하에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는 본인 스스로(22.5~34.1%) 또는 주로 본인이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49.6~59.2%)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인의 노후를 자녀 및 가족에게만 의존하겠다는 응답 역시 대부분 한 자리 수에 그쳐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에서 가족관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가족관계 하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부모의 노후는 성장한 자식이 책임지는 형태를 지녔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한국인의 인식은 전통적인 가족관계와는 완전히 달리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은 반면 본인 스스로의 높은 책임 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이런 모습은 국가의존적인 유럽국가와도 전혀 다

른 모습이기도 하다. 낮은 자식 및 국가 의존도, 높은 본인 책임 의식은 건전한 시장경제에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으나 개별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현저히 증가할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⁶

4. 한국의 고령화 정책

한국은 특히 한국전쟁 이후 출생(1955~1963년생)한 이른바 베이비붐세대(baby boom generation)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압축적 고령화현상을 보여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법 제정과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⁷

한국의 고령화 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2008년 일부 내용 수정·보완,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12년 시행계획 지침이 수립되었고 각 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되었다.

4.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총 4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의 수립, 추진체계, 평가 및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수립되어야 할 저출산 대책은 인구정책,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모자보건의 증진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이 있으며, 다음으로 고령사회 대비 정책으로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와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 등 가족

⁶ 박명호, "한국과 EU의 고령화 비교 연구", <EU학 연구> 16-1, 한국 EU 학회, 2011.

⁷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22&cid=46634&categoryId=46634>

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등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넷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중요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위원회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장되며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4.2. 제 1 차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1 차 기본계획의 고령화 정책 관련 정책목표는 "고령화 삶의 질 향상 기본 구축"이다. 추진과제는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노후준비 기반 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노후 소득원 확보를 통해 적절한 노후 소득보장체계구축 및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한 최저소득을 국가가 보장한다. (2) 현재 소득보장체계 틀 하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통한 지속성 확보의 우선 추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 등의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 및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한다.

둘째,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을 들 수 있다. (1)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의 전환, 노인질환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종합지원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위주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중증노인의 요양서비스 제공의 개인 및 가족의 부담을 완화한다. (3)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해 독거노인과 학대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노인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셋째,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들 수 있다. (1)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후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자원봉사, 여가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3) 노후생활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넷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들 수 있다. (1)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공동 주택 공급, 안전 주거공간의 최저기준 및 무장애 개념을 도입한 주

택설계지침의 마련 등을 통해 노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2) 고령 친화적 도로·교통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고령자를 고려한 교통 환경 기반 등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4.2.1. 고령화 정책의 성과

제 1 차 기본계획에서의 고령화 정책의 성과로 노인의 소득보장, 요양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큰 틀을 구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통해 노인의 기본적 소득보장 실현 및 공적소득보장 수혜율을 2009년 98.3%까지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노인요양보장체계의 중요한 기틀 마련, 노인과 가족 요양요구를 해소하여 2009년 5% 수준, 요양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충족
-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영역을 비롯한 주택·교통 등 다양한 영역별 다양한 정책 개발
- 노인 삶의 보건복지영역에서의 접근은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노후건강을 위한 평생건강체계 구축,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제도 발전
-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영역 이외의 고령친화적 주택·교통, 다양한 노인의 삶을 풍부하게 할 문화지원과 생활체육 정책 등 개발

4.2.2. 고령화 정책의 한계

제 1 차 기본계획의 여러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고령화 정책부문의 구각별 목표의 불명확과 전략부재 등으로 국민의 낮은 정책 체감도, 충분한 효율성 제고 실패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수급대상자가 배제되거나 부정수급자 문제 발생
- 기존의 시스템을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하여 여러 고령화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거의 부재한 상황

4.3. 제 2 차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제 2 차 기본계획은 베이붐 세대로 정책대상 확대, 예방적 노력 강화, 정책대상별로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표준화(베이비붐 세대)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2010년 18.6만 개 → 2011년 20만 개), 농지연금 시행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및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현세대 노인)
- 고령자 주거안정에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의 단계적 확대,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노인돌봄서비스 확대(2009-2010년 1천명 → 2011년 176천명)

4.3.1. 정책의 문제점

제 2 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 1 차 기본계획 중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부재이다.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재구조화하겠다고 언급했을 뿐 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 부재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도 현재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는 요양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등급 외 판정 노인세대에 대한 서비스 확대 계획 마련 부재
-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의지 실종

근로가능인구의 저변 확대와 이들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데서 오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돌봄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⁸

⁸ 유영성, 임영광,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2.

5. 카자흐스탄의 고령화

사회가 고령화되는 과정이 현재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50 년에 노인의 수가 젊은층의 수를 초과할 것이다. 이 과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1998 년에 발생했다.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국가와 지역의 다수의 미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국제기구가 이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N 의 예상에 따르면, 2050 년에는 노인의 수가 약 15 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4.7%에 해당하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세 그룹으로 나눈다.

- 1) 급격히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2050 년 노인의 수는 25%) - 홍콩, 중국, 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 2) 평균 속도의 고령화(2050년 노인의 수는 20-25%) -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터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 3) 느린 속도의 고령화(2050년 노인의 수는 20%) -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등.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 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의 글로벌 과정에 해당된다. 이러한 고령화는 출산율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기대 수명 증가에 기인한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고령화의 한계를 넘었으며, 앞으로 이 과정은 크게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 년 65 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6.7%이었고, 2004 년에 그 비율은 7.4%에 달했다. 인구 연령 구조는 2005 년에 65 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8%까지 증가하다가 2010-2015 년 7.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2015 년 이후 2030 년까지 노인의 비율이 11.5%로 증가하여, 확고한 고령화 과정이 예측된다.⁹

6. 고령화 대응 방안

카자흐스탄도 2015 년 이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고령화에 대한 조치를 취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고 지적, 문화적 요구의 실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카자흐스

⁹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 Казахстане: взгляд в будущее, Алматы, 2005г. 94-97стр.

탄 고령화는 인구 수 증가와 별도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고령화에 대처할 방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노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보호 강화
- 복지 체도를 개선하여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개선
- 노인에게 재활 및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설립
-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 확대 및 사회적 관계 강화
- 노인 관련 공공 기관, 단체, 협회의 조정 개선

6.1. 공공 정책 개발 및 실시 방안

연령이 높은 노인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적,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및 의료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기관이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확장(노인센터, 숙박시설, 모바일서비스, 병원 등)
- 노인과 참전 용사를 위한 의료 혜택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시설 개선
- 연금 시스템, 누적연금제도의 개선 및 자발적인 직장연금제도의 장려와 확대
-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시스템 개선
- 노인의 권리, 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단체의 지원
- 사회 기관과 공공 단체의 통합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참여 촉진
- 자원봉사 및 고용을 통해 노인의 사회 활동 강화
- 노인을 위한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정보기술의 개발
- 기성 세대의 사회보장에 대한 연구 실시

6.2. 입법 기반 강화

인구의 고령화, 노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입법 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전히 인구의 고령화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고

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입법 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노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 조직 및 기관의 법적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6.3. 인프라 개발

국가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의 주요 목적은 노인층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고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문 의료 및 복지 정책의 개발, 노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보건 분야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우선적으로 의료 분야의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난한 독거노인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을 위한 주택 및 전문 매장을 개발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과 재활센터를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끝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의 지원과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6.4. 가족가치중대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 교통, 의료 서비스, 공공 요금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노인의 연금을 가구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노인의 취약한 경제력을 감소시켜 가족 내에서 노인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고 신용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인들이 연장자로서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민족의 전통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기 위해 젊은 세대의 교육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맺는 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고령화는 그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한국에 비해 카자흐스탄의 고령화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두 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경제, 생활, 가정, 의료, 연금, 주택, 고용,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

는 기간도 짧아 앞으로의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령화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한 후, 정부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고령화 대책을 이미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은 아직 고령화 과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출산률을 높이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지 않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경제학보> 19-1, 2012.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19, No.1, Spring 2012)
2. 통계청, 2013.
3. 박명호, “한국과 EU의 고령화 비교 연구”, <EU학 연구> 16-1, 한국EU학회, 2011.
4. 보건복지부, 2006.
5. 통계청, <고령자통계>, 2010.
6. 김현진, <고령화사회·정치적 영향 - 한국과 일본의 경우>.
7. 유영성, 임영광,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2.
8. Neil Howe, Richard Jackson, Keisuke Nakashima, <The Aging of Korea>, March, 2007.
9.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world/a-bleak-future-and-population-crisis-for-south-korea/article21249599/>
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22&cid=46634&categoryId=46634>
11.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 Казахстане: взгляд в будущее, Алматы, 2005г. 94-97стр.